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윤병갑



가뭄이 들면 저수지 수문을 열어 목말라 하는 통일벼의 갈증을 해소하고, 홍수 때는 칠층 같은 어둠과 무서움을 잊은 채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문을 열린 농부 아들 큰 형님의 모습이 오늘따라 정지함으로 다가온다.

과 잠재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하에 '녹색의 땅' 전라남도라는 컨셉으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고, 은퇴 후 귀농, 귀향인을 위한 보금자리로서도 손색이 없는 전통문화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

30년 안에 농업은 우리의 효자산업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제시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정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과 자원이 아무리 차별화되고 풍부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관리하고 실천하는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판단된다. 전국 최초로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점 또한 분명 미래경쟁력의 핵심 요인일 것이다.

## 대선 후보와 우리의 농업정책

문 웰빙생태도시의 전형이 아니라고 싶다.

필자는 지난 3월 14일 22개 시·군 지자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2012년 전라남도도정 시책교육'에 다녀왔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농업, 농민, 농촌 즉 3농 정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촌은 식량전쟁과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먹거리 산업과 더불어 섬, 해안선과 갯벌 등의 해양자원이 풍부한 청정자연자원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전남의 미래는 밝게 펼쳐져 있다. 앞으로

지난 7월 10일에는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황주홍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제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로 대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촌 인구감소, 농어촌 마을 공동체 붕괴 등 현재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에 대한 농정과제를 제안했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FTA시대 우리 농업, 농촌이 사는 길이라는 워크숍에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3농 없이는 결코 자주, 자립 국가를 지속하지 못한다. 기후변화, 식량

부족, 석유파동, FTA태풍을 제대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농업, 농민, 농촌 즉 3농이 핵심임을 명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박준영 전남지사는 대선출마 선언을 통해 농부의 아들로 흙과 함께 자랐다. 정직을 생명의 한 농부처럼 정직한 '농부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은 3농이라는 화두를 안고, 농업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박 지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선 후보들이 3농 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야 한다.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상당한 역할을 앞으로는 농촌 생태도시가 맡을 것임에 틀림없다. 앞으로는 농촌주민의 시대요, 창조도시 생태도시의 중심으로서 농어촌환경이 우리 의식주 문화의 근간이 되고 트렌드가 될 것을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녹색의 땅' 전라남도의 3농 정책이 미래 산업의 화두로서 위극복은 물론 국가발전의 새로운 핵심요소임을 인지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호남지역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칼럼



김정호

세상을 살다 보면 애써 모른 척하고 넘기면 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는 과정에서 애써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구체적 타당성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를 간혹 접한다.

실정법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상식에 괴리가 있을 때가 그런 경우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일 게다. 법률과 관례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칫 어설플 정도의 감으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처리를 흐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기계적으로만 법을 해석하고 변론하기에는 너무도 난감한 상황에 놓여 법과 도덕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종종 있다.

## 법과 도덕 사이에서

몇 달 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은 피해자나 그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피고인의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는 부인과 이혼하고 어머니 집에 살면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의 생계는 하루아침에 막막하게 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할 사람은 피해자의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할머니가 아니라 피해자와 이혼한 뒤 어디에 사는지도 잘 모르고 몇 년 동안 딸과 연락도 두절됐던 부인이다.

냉정하게 보면 법적 친권자인 피해자 부인과 합의하고 재판부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편할 일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이들의 사망에 망연자실한 노모와 당장 피해자의 어린 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필자의 마음이 괴로웠다.

필자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이혼한 부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두 만나서 여러 차례 설명도 하고 음소한 끝에 합의금을 양측이 서로 적정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변호인인 필자가

추진하고 노력한 합의는 법적인 합의와는 거리가 먼 사회윤리적인 합의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사회윤리적 합의는 이 사건에서처럼 합리적인 양보가 이뤄지면 아름다운 일이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으로서 주체 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양쪽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들을 수도 있다.

몇 년 전 유명 여배우인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한 남편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친안함 절멸사고로 인해 사망한 하사관의 사망보상금과 위로금을 이혼한 지 10년이 넘는 부인이 받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다행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민법 중 가족법이 개정, 오는 2013년 7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은 번거롭고 법률과 기존의 관례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편리한 일이나 부지불식간에 편리함에 익숙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돌아볼 일이다. <변호사>

## 기고

### 그린피 개소에 인화, 내수 활성화 기여할 것



정상균

내린 것은 내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골프장은 외국에 비해 코스나 서비스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외국(특히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골프장)골프장에 비교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는 바로 과도한 세금 부과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하게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급증세에 있다. 이들 골프프인들이 굳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내에서 골프를 치는 돈이면 해외에서 마음껏 미국적인 풍경을 즐기면서 저렴한 비용에 골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해외골프를 줄이고, 국내 골프를 유도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정책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입장료)에 붙는 세금이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이라는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 고시(당시 특별소비세)됐다.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한 1인당 2만1120원이다. 2009년부터 2년간은 조세

제한특별법에 따라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지난해 다시 환원됐다.

그러나 개소세는 매우 형평에 어긋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골프장에 붙는 개소세는 특히 내국인 카지노(5000원)의 4.2배, 경마장의 23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더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변하고 인식도 변화야 하는데 시대만 변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골프는 이제 사치성 귀족 스포츠가 아니다. 골프는 2016 브라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의 골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대중화됐다는 얘기이다. 이제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선 것이다. 실제 작금의 귀족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를 꼽자면 승마나 요트를 들 수 있다. GNP 2만 달러 시대에 가장 걸 맞는 스포츠가 골프이며 3만 달러 시대에 인기 있는 스포츠가 승마나 요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골프에 개소세가 붙는 반면 승마나 요트 등 고급 레저 스포츠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과도한 조세 제도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일반 스포츠 세금은 0.2~0.7%인 반면 골프장은 4%로 20배가 넘는 폭탄 세금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골프장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골프가 대중스포츠가 되려면 10만원대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무등산 컨트리클럽 사장>

## 시설

### 계속되는 불별더위 건강관리 유념해야

광주·전남지역에 폭염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준 제7호 태풍 '카논'이 잠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내면서 짧은 장마가 끝나고 35도가 넘는 불별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로 인해 열사병 등 무더위에 쓰러지는 온열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낮 12시20분께 영광군 염산면에서 김모(67)씨가 비닐하우스 작업 중 쓰러져 병원에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이날 장흥읍 탐진강변에서 산책하던 고모(49)씨와 해남군 화산면에서 가로수 식재작업을 하던 이모(51)씨도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광주 7명, 전남 18명 등 25명에 이른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에 비해 80%나 늘었고, 이 가운데 67%가 50대 이상의 고령자란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은 더위를 물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세가 꺾이지 않아 적어도 8월 초순까지 폭폭 찌는 가마솥 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리라 예보다. 서민들에게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든 여름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체온 조절 능력과 체내 수분이 부족한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땀방울이 잘 안 되는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 심장 질환자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불별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낮 12~4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혼자서 농사일을 한다거나 체력 소모가 많은 의무활동, 격렬한 운동 등을 삼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건강관리를 당부한다.

### 남구청 건축허가 '잘못' 책임 막중하다

공정이 90%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광주시 남구 양과동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6일 주식회사 H사가 남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판결 확정 때까지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가 내린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에 해당된다. 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로 봐야 한다는 점과 해당 업체가 건축허가라는 '공정 견해'를 믿고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축비를 투입한 상황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 시설은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연면적을 초과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해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광주시

도 한달 뒤 이를 근거로 남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잘못됐다며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허가→허가 취소→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파소한 데는 전적으로 남구청에 책임이 있다. 지자체의 설부른 인허가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주민들과의 갈등을 자초한 것이다.

허가가 당시 주민들이 의견 수렴절차가 무시됐다며 그렇게 허가에 반대했음에도 서둘러 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0억 원에 이르는 건축비에, 공정이 90%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허가 취소를 결정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남구청은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건축업무 전반에 대한 수습을 단행해야 한다. 광주시도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잘못이 적발될 경우 담당자와 책임자는 물론 지자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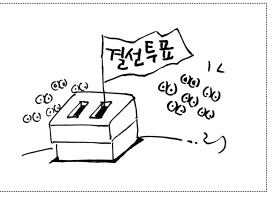
5년 중임제의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유효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이른바 '결선투표'다. 여태껏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는 없었다고 한다.

올해 실시된 제24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22일 1차 투표에서는 극우부터 극좌 정당까지 10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

(48.7%) 대통령 등 모든 당선자가 과반 득표에 미달했다. 선거권자 대비 지지율은 5명 모두 35% 미만에 그쳤다. 국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프랑스와 브라질 등 20여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선투표제는 과반수의 대표성을 부여해 안정적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투표율을 끌어

## 결선투표



올리고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시민사회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통합당 율혜영·이종걸 의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그들이다. 결선투표제는 유권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투표하는 데 따른 시간·비용 문제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장점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일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